

##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서홍관



안데스 산맥에 자생하는 풀이 있었다. 토착 원주민들이 그 풀에 무슨 이유에선지 불을 붙여 빨개 되었다. 콜롬비아가 1492년에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습관은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유럽의 담배는 아프리카와 인도양을 지나 일본까지 전해졌고,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졌다.

우리나라에서 담배에 대한 기록은 1643년 이수광이 지은 지봉유설에 '지금 사람들은 담배고를 많이 심는다'라고 최초로 등장한다. 담배를 즐겨 피웠던 정조는 '차가운 몸은 덥혀주고, 더운 몸은 식혀주니 이 아니 좋은가' 하는 담배 예찬문을 쓰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담배가 해롭다는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 성호 이익은 담배 해악론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러나 담배의 해로움이 본격적으로 알려진 것은 1950~1960년대의 연구 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문제는 이렇게 우리나라에 전해진지 4백 년밖에 안된 담배가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려 오천만 남한 국민 중 무려 천만에 가까운 흡연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담배 때문에 매일 150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을 수개

월 동안 공포에 떨게 했던 신종플루로 사망한 사람이 250명인데 담배 때문에 이를 동안 사랑하는 수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는 암이고, 2위는 뇌혈관질환이며, 3위는 심장질관 질환인데 담배는 위의 세 가지 모두에 주된 위험요인이다. 따라서 대통령이든 보

연을 1급 벌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간접흡연은 천식을 악화시키고, 심장질관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심각한 질병이 아니라도 코와 눈의 따가움, 가슴 답답함을 일으켜 불쾌감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27일 국회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었다. 개정의 골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과거에는 금연구역은 오로지 보건복지

부처 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또한, 주거공간인 아파트에서도 베란다,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금연으로 선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옆집 흡연자가 복도에서 담배를 피워 어릎에도 둔을 얼어 놓을 수 없었던 이웃 주민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다가 말다툼이 벌어지는 일이 있었다. 예전에는 실외에서 흡연하는 것은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국민들도 실내든 실외든 간접흡연을 당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4천만의 비흡연자들은 전민의 흡연자들에게 맑은 공기를 마실 권리 요구하고 있고 이는 현법에도 보장되고 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출근할 때 앞사람이 흡연할 때 뒤따라가면서 담배연기를 막는 불쾌감을 호소한다. 이제는 혼잡한 거리와 체육경기장 관람석처럼 사람이 조밀한 공간에서는 모든 실외공간도 금연이 선포될 전망이다.

흡연자들은 이러한 흐름에 초조해 하기도 하고, 우리를 너무 밀어붙인다고 불쾌해 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래를 부를 자유는 있지만 날들을 불쾌하게 하면서 고성방가를 부를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니듯이 스스로 건강을 해치는 흡연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주변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불쾌하게 만들 권리까지는 없는 셈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국립암센터 의학박사〉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간접흡연을 없애야 건강 선진국

건복지부 장관이든 의사든 치과의사든 우리나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담배 문제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물을 바른 방향이라고 말할 수 없다. 사망원인 4위는 자살인데 우연찮게도 흡연자들은 자살률도 높다.

처음에 금연운동을 할 때는 흡연자의 건강을 위해서 금연을 주장했는데 점차 간접흡연이 해롭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금연운동은 새로운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 이제는 흡연자는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해친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간접흡연으로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는 것이 밝혀져 국제암연구소에서는 간접흡

부장관만이 정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에 의하여 대중교통수단, 의료시설, 승강기에서 흡연할 경우 범칙금 3만원, 역 대합실, 버스터미널, 기타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범칙금 2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도 오로지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려한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소리 소문 없는 조용한 혁명이 시작되고 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법에 의해 음식점과 술집을 비롯한 다중이 모이는 모든 실내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선포해야 하며, 실외공간이라 하더라도 공원이나 해수욕장 등의

## 시설

## 성남시 재정파탄이 지역도 남의 일 아니다

남구, 전남에서는 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함평·장성·완도 등 9곳에 달한다.

지방 재정이 이렇게 악화된 데는 무엇보다 현 정부의 지방 출대와 단체장의 방만한 재정 운영에 있다. 정부가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내려 보내는 교부금이 크게 줄었고 정부가 맡아야 할 사회복지비 지출을 지방에 떠넘긴 게 큰 요인이다. 단체장들이 무분별한 개발사업이나 차별화 없는 축제 등을 벌이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면자 지방 재정 위기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교부금 지원을 늘리고 사회복지비 지출을 확원시키는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 지자체는 건전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심의·평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회는 예산심의에 있어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되며, 예산 편성과정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참여예산제'도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면자 지방 재정 위기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교부금 지원을 늘리고 사회복지비 지출을 확원시키는 방안을 찾았어야 한다. 지자체는 건전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예산의 심의·평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의회는 예산

## 전자발찌 착용 확대해서 흉악범죄 막아야

개정 전자발찌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법)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전자발찌 착용자가 크게 늘어나게 됐다. 개정 법률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을 2007년 7월 16일 이후 교도소에서 출소하거나 출소할 예정인 성폭력사범과 살인 강도 등 흉악범 까지 소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발찌 소급 적용 검토 대상자는 무려 6천916명에 이르며 이중 3천739명은 아무 제한없이 대로를 활보하고 있다고 한다. 경찰이 법 시행에 맞춰 이를 성범죄 전자장을 특별 관리할 계획이나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미 짚값을 치르고 출소한 성폭력범에게 또다시 전자발찌라는 도구를 이용해 물리적 제한을 가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여중생을 성폭행·살해한 김길태가 이미 두 번에 걸친 성폭력 범죄로 11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또 다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를 것처럼 성폭력 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일반 범죄자보다 훨씬 높다. 성범죄 전과자가 제한 없이 거리를 활보하도록 방지해서는 안되는 이유다.

전자발찌의 효과는 이미 입증이 됐다. 지난해 9월 이후 1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 472명 중 재범자는 단 1명에 그쳤다.

전자발찌 도입 이전 성범죄자의 재범률 5.2%포인트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치다. 실시간 위치추적 되는 전자발찌 때문에 심리적 압박을 받아 범의(犯意)가 여의치 않은 데다 범죄를 저지르면 위치추적 정보를 통해 쉽게 체포될 것을 의식한 탓도 크다. 살인과 강도 같은 흉악범은 물론 재범 충동이 일어나기 쉽다는 방화범 역시 전자발찌를 적용할 경우 재범률은 눈에 띄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전자발찌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법 집행이 엄정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 無等鼓

지자체도 개인이나 기업과 똑같다. 빚을 지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아니면 파산이다. 일본이나 미국에선 헌한 일이다.

일본 훗카이도 유바리시가 대표적이었다. 유바리시는 지난 2006년 무분별한 관광사업을 벌이며 끌어온 총 360억엔(약 4600억원)의 빚을 깊지 못해 파산을 선언했다. 기다렸다는 듯 주민들이 빠져나갔다. 12만이던 인구가 1만명으로 급감했다. 절반으로 줄어든 공무원들은 한 해 1000시간이 넘는 애근을 하면서도 수당 한푼 못 받았다.

재정비상사태를 선포한 미국의 캘리포니아는 작년 6월 교도소를 운영할 돈이 없어 형기를 마치지도 않은 죄수들을 석방해야 했다. 재정이 파탄 난 하와이에선 공무원들이 한 달에 사흘씩 강제휴가를 떠나야 한다.

지자체 파산은 공무원들의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결국 주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된다. 일본 나리현 고세시는 최근 국민건강보험세의 상한액을 올렸

다. 훗카이도의 유니초는 고정자산세의 세율을 현행 1.4%에서 1.6%로 인상하기로 했다.

민선 5기를 시작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파산경보가 요란하다. 무려 3222억 원을 호화청사 신축에 쓸어버린 경기도

성남시가 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한 것이다. 성남시는 그동안 부족한 돈 5200억원을 엉뚱하게 판교신도시 건설에만 쓰게 돼 있는 특별회계에서 끌어다 썼다고 한다. 부산 남구청도 새 청사 짓는 데 돈을 평생 쓰다가 작년 말 20억원의 은행대출을 받아 월급을 준 적이 있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 재정이 바닥나도 중앙 정부가 일정액을 보전해줄 수 있는 까닭에 파산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회복지 서비스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광주·전남도 화약고다. 광주 5개 자치구 만해도 올 하반기 재정 부족분이 850억 원을 넘는다. 남의 일이 아니다.

/김주정 여론매체부장 jjnews@

##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들 암체주차... 양심지켰으면

지난 시절의 잘못을 깨우치고 후세에 부끄러움 없이 넘겨주어야 한다. 생태복원을 하기 위해서는 상류에서 맑은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물은 흐름으로써 자작작용을 일으켜 맑은 물이 된다. 그런데 영산강 하구는 둑을 쌓아 담수호가 됐고, 상류는 4개 댐을 막아 건전화가 되어 있다. 광주를 비롯한 인근 8개 시군에서 나오는 각종 생활오수와 산업폐수, 축산폐수와 농악 등을 여과 없이 유입되어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다.

수질개선 사업은 우리 세대의 사명이다. 근본적으로 생태복원을 마무리해

는 물을 담수하여 건전화를 예방하고 흉수 시에는 가동보를 작동하면 퇴적층과 방류를 것이다.

우리나라 연중 강수량이 1200mm정도로 상류에 오염의 제일 주범인 광주시 생활 오수와 산업폐수 등을 처리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하지만, 수질오염 비용은 전체 예산의 1.8%밖에 안 된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토목공사만 해 운하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의 경우 지난 1989년 영산강이 범람하여 용산교와 용두교가 유실되고

## 영산강, 수질개선·흉수예방 대책 시급

제 연구되고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재료는 아니고 그 동안 치과에서 금속을 사용하지 않고 전체가 포세린으로만 만드는 치아 색과 유사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를 사용하려는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유럽을 중심으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가 많이 시도되고 있다.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는 치아와 같은 흰색이기에 잇몸이 얇은 경우에도 비쳐 보이는 문제가 없으며, 혹시 나이가 들어 잇몸이 내려가 노출되어도 옆 치아와 비슷하게 심미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르코니아는 임플란트 재료로 새롭

소·돼지 가죽은 물론 인명 실종과 기독교, 침수 등으로 막대한 흉수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1995년 당시 강운태 광주시장이 국비나 시비 없이 민자를 유치, 200년 빈도의 흉수 위선을 1.1m 내려 하상준설과 고수부지 정비 등을 처리하기 위해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하지만, 수질오염 비용은 전체 예산의 1.8%밖에 안 된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토목공사만 해 운하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영산강 개발 사업을 하려면 4개 계절

환경학과 수리모형실험을 해 지역별 생태는 어떻게 변하고 수량과 수질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해야 한다. 이런 과학적 분석과 설득, 접근방식이 선행되면 반대론자들도 수긍할 것이다. 영산강 수질개선과 흉수 예방책이 잘 마무리될 것이다.

영산강 수질개선과 흉수 예방책이 잘 마무리될 것이다.

전 광주시 건설국장

##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들 암체주차... 양심지켰으면

얼마 전 간식거리 좀 살려고 대형 마트에 갔던 적이 있었다. 마트에는 적잖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주차공간이 넉넉하지 않았다. 나도 차를 주차하기 위해 여기저기 빙 공간을 찾았다. 그런 중 장애인 차량 한 대가 차를 대지 못한 채 빙빙 도는 게 보였다.

사소해보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남을 생각하는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다. ▲박나영·광주시 남구 구소동

했다. 그런데 그 순간 비장애인인 박승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주차 요원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공간에 버젓이 차를 대고는 유유히 나오는 것이 보였다. 결국, 장애인 차량은 차를 대지 못하고 공간을 찾다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는 게 보였다.

사소해보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좀 더 남을 생각하는 여유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봤다. ▲박나영·광주시 남구 구소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활용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주십시오.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光州日報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편집국내부 222-4918 〈F A X 227-0118〉	사 회 2 부 2200-692	경 영 지 원 국 2200-511 문화 흥 보 국 2200-541
면 접 부 2200-672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정	